

온실가스 저감 불확실성 제거해야

상의, 자발적 감축 가로막는 장애요인 ... 인센티브에 차별화 필수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투자결정에 장애가 되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하며 의무감축 이전과 이후를 분리하는 정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산업계 기후변화협약 대책반>은 5월23일 <기후변화협약 대응 자발적 온실가스 저감 촉진 방안> 건의서에서 2005년 2월 교토의정서가 발효됐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기술, 재정적 여력 부족 등으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 노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협약 대책반은 기업의 온실가스 저감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의무감축 이전의 불확실성 해소 ▲의무감축 전·후 분리대응정책 수립 시행 ▲의무감축 이전의 선 자발이행 등을 국무조정실, 산업자원부, 환경부 등에 건의했다.

정부는 최근 온실가스 저감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 확대 및 보상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구체적 감축의무가 없는 현시점에서 투자를 가로막는 불확실성이 먼저 제거되지 않는다면 당초 취지는 무색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태이다.

기후변화 협약 대책반은 건의서에서 ▲분명한 인센티브 보장 ▲정책의 실행력 제고 ▲기회균등 및 혜택 차등 등 3대 실행원칙을 제시했다.

기후변화협약 대책반은 의무감축 이전에는 자발적 참여에 대한 리스크가 큰 만큼 유인 및 보상 중심의 대책을, 의무감축국에 포함된 이후에는 배출권거래제 또는 탄소세 등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향후 의무감축량 할당 때 기업의 선 자발이행 노력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감안해줄 것을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2001년부터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한화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함께 <산업계 기후변화협약 대책반>을 구성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해 왔다.

<화학저널 2005/05/24>